

『인권연구』 6(2): 285-325.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6(2): 285-325.

DOI: <http://www.doi.or.kr/10.22976/JHRS.2023.6.2.285>

[일반논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차별을 넘어”

: 광주지역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5·18정신 퀴어링하기*

김 올 뜬**

한글초록

5·18정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담론 경합을 통해 역동적으로 구성된다. 본 논문은 소통적 담론 영역에서 광주광역시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오월 정신을 (재)규정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오월 정신을 퀴어링하는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은 개신교 우파로 오월 정신을 이성애규범적 질서의 준수와 유지로 정의하는 담론을 생성하였다. 이에 반하여, 광주지역 성소수자 인권 운동은 국가폭력에 저항하고 희생되었던 오월 광주 시민과 이성애규범성에 비순응하고 다종다양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퀴어 사이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담론적 전략을 수행하였다. 오월 광주 시민들과 퀴어 사이의 공통된 소수자성에 착목함으로써 오월 정신 계승의 의미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저항하고 이를 통해 살만한 삶의 조건을 구축하는 것으로 확장하였다. 또한 인권 도시의 의미를 성소수자 친화적 도시로 (재)정의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오월 정신을 (암시적으로) 확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대항 담론적 실천에도 불구하고 5·18에 대한 지배적 재현에서는 여전히 성에 대한 이원론적이고 위계화된 접근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이성애규범성과 성별이분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넘어서서 5·18 기록하기, 기억하기, 그리고 기념하기 등 전 과정에 걸쳐서 주류화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본 논문은 2023년 광주광역시 ‘5·18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논문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주제어: 5·18정신(오월 정신), 퀴어링, 성소수자 인권 운동, 인권 도시, 개신교 우파

목 차

- I. 여는 말
- II. 연구의 분석틀
- III. 반-성소수자 운동의 오월 정신 이성애규범화하기
- IV. 광주지역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오월 정신 재해석하기
- V. 맺는 말

I. 여는 말

1980년 군부독재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자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5·18항쟁은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열흘간의 항쟁은 진상 규명과 군부독재 종식을 열망하는 오월 운동으로 계승되어 한국 사회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하였다. 민주화 이후에 오월 운동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 회복, 배/보상, 정신계승과 같은 5원칙을 통해 이행기 정의를 확립해 갔다. 5·18항쟁이 민주화 운동으로 명명되면서 5·18항쟁은 국가적으로 기념하고 기억하는 ‘역사’가 되었다. 민주화 이후 5·18 민주화운동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한다는 것일까?

5·18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5·18항쟁의 성격과 정신을 규명하는 여러 개념들이 제시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최정운(2015: 199)이 절대공동체 개념을 통해 5·18항쟁 당시에 “인권, 자유, 평등, 민주주의 등과 같은 모든 이상이 모두 열크러져 하나의 이름 모를 느낌으로 존재”했음을 강조한다면, 박주용(2007: 30)은 5·18항쟁 당시의 연대공동체에 초점을 맞추어 “서로주체성”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5·18 무장투쟁에 주목한 김정환(2012: 129)은 이를 국가

폭력과 대결하는 대항 폭력이 아닌 폭력 자체에 대항하는 “반(反)폭력”이었다고 정의하고 있고, 진태원(2023: 78)은 더 폭넓게 5·18정신을 다종다양한 배제와, 지배, 차별에 “불화”하는 힘으로 규정하고 있다. 5·18항쟁과 그 정신에 대한 여러 해석과 설명은 5·18을 기억한다는 것이 항쟁의 고정된 의미를 계승하는 과정이 아니라 끊임없는 담론 경합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형성해 가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김희송(2015: 65)의 지적대로 오월 정신¹⁾의 현재화는 5·18항쟁 당시 시민들이 실천하고 보여주었던 가치와 태도를 “현재 삶의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새롭게 구현해 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5·18정신 계승은 5·18을 현재의 맥락에서 끊임없이 재해석하려는 담론적 실천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김영희(2020: 162)에 따르면 5·18을 과거만의 문제나 사건으로 국한하지 않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당사자성의 확장이 필요하다. 5·18 당사자성이 확장될 때 5·18정신 역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5·18 당사자성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진짜 당사자인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맥락에서 5·18항쟁을 지속해서 소생시키는 실천이다. 5·18항쟁의 현재적 의미를 발굴하려는 실천을 통해 당사자라는 정체성이 구성되는 것이다. 이는 5·18을 박제화된 사건과 같은 명사적 의미가 아니라 5·18을 지속해서 현재화하려는 동사적 의미로 재개념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월 정신을 다양한 대항 담론으로 확장, 해석할 수 있다면 오월 정신을 성소수자 인권과 같이 그동안 인권의 제도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주변화되고, 보수 행위자의 커다란 저항에 부딪혀 온 영역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 달리 말해 5·18정신을 한 가지 이념에 가두기보다는 “민주, 평화, 대동, 저항, 해방 등 복수의 이념으로 끝없이 재해석”(박구용, 2010: 73)²⁾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5·18정신을 쿼

1) 본 논문에서는 5·18정신, 오월 정신, 광주 정신을 혼용해서 사용하였다.

2) 이와 유사하게 최영태는 5·18항쟁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되찾고, 평화로운 국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운동”(최영태, 2005: 143)이라는 측면에서 민주, 인권, 평화 운동의 성격을 동시에 지닐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링(queering)하는 것도 가능할까? 2018년 광주에서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앞두고 찬반 양측 모두 자기주장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과정에서 오월 정신과 퀴어문화축제를 연결 짓는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졌다. 당시에 5·18구속부상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민주 성지의 중심 5·18 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퀴어축제는 오월 영령들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저지르는 패륜적 문화행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김현주, 2018). 이에 대해 퀴어문화축제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80년 5월 광주는 모두가 함께 평등하게 사는 대동 세상을 위해 헌신한 오월 영령이 잠든 곳”이며 “모든 소수자를 아우르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김현주, 2018)고 주장했다.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상충하는 주장 모두가 오월 정신을 차용하는 상황은 역설적으로 오월 정신이 구성 중에 있음을 보여준다. 오월 정신이 담론적 경합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면 이성애규범성에 저항하는 담론으로 오월 정신이 확장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본 논문은 오월 정신의 (재)구성 가능성에 주목하여, 광주광역시(이하 광주) 성소수자 인권 운동³⁾이 5·18정신을 재해석하고 확장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오월 정신의 계승이 광주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지역으로 분석 지역을 한정시킨 이유는 광주를 제외하고 오월 정신과 성소수자 인권 아젠다를 연결하는 지역 시민사회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김정한(2010: 185)의 지적대로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담론화하는 과정에서, 5·18의 저항성이 과거의 사건으로만 기념되고 5·18항쟁에 담겨 있던 “저항적 상징성”은 소실되어 가는 양상을 보여 왔다. 하지만 오월 정신을 과거 민주화 운동으로만 국한한 전국 담론과 반대로, 5·18항쟁 발생지라는 역사적 배경

3) 본 논문에서 다루는 성소수자 인권 운동은 성소수자 단체나 성소수자 당사자 운동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신 이성애규범성과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집합 행동으로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정의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월 정신을 성소수자 인권의 관점에서 다시 쓰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담론적 실천에 주목하였다.

속에서 광주 지역의 시민 사회는 지역의 다양한 사회운동 아젠다와 오월 정신을 절합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추후에 광주 지역 외에서도 성소수자 운동 아젠다와 오월 정신을 절합하는 담론적 실천이 발생하게 되면 분석의 지역 역시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의 분석틀

1. 이론적 논의: 소통적 담론 영역에서 운동과 반-운동의 결합

신제도주의 접근에 따르면 제도는 게임의 규칙으로 정책과 법률과 같은 공식적 제도와 관행, 규범, 관념, 인식과 같은 비공식 제도로 구성된다. 오월 정신은 5·18의 현재성에 대한 사회적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비공식 제도로 간주할 수 있으며, 오월 정신의 확장은 비공식 제도의 변화로 개념화할 수 있다. 하나의 (비공식) 제도로서 5·18정신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서로 다른 해석이 충돌, 경쟁, 보완하는 담론 결합의 과정이다. 오월 정신의 의미가 재구성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신제도주의 분과 중에서 슈미트(Schmidt, 2008, 2010, 2016)의 담론적 제도주의 접근에 주목하였다. 담론적 제도주의는 “담론적 상호 작용에서 아이디어가 언제 어떻게 행위자가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지”(Schmidt, 2010: 4)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오월 정신의 의미를 지금의 맥락에서 확장하려는 담론적 실천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틀이 될 수 있다.

슈미트는 제도가 행위자를 제한하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만들어 내고 변화시키는 행위자 내부의 구성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Schmidt, 2008, 314). 쿨라윅(Kulawik 2009: 268)의 지적대로 여기서 “내부적”이라는 것은 행위자가 “제도를 행하는(do institutions)” 방식으로 제도가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 수행과 관련해서 슈미트는 행위자의 두 가지 종류의 능력을 개념화한다. 하나는 행위자의 배경 관념적 능력으로, 이것은 행위자가 제도를 만들고 유지

하게 한다. 다른 하나는 행위자의 전경 담론적 능력으로, 이는 행위자가 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독해하고, 제도를 변화하게 한다(Schmidt, 2010: 4). 담론적 제도주의는 아이디어와 담론이 “지각이 있는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주체”(Schmidt, 2016: 319)들에 의해 생성되고, 표현되고, 논쟁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일 정신은 과거의 유산에 얽매어 고정되기 보다는 지각이 있는 행위자의 담론적 실천을 통해 새롭게 규정될 수 있다.

슈미트는 행위자의 담론적 실천이 발생하는 영역을 두 가지로 범주화하고 있는데 하나는 조정적 담론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소통적 담론 영역이다(Schmidt, 2008: 310). 슈미트(Schmidt, 2008: 310)에 따르면, 조정적 담론(정책 영역) 영역의 행위자는 “정책 구성의 중심에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인 정책 행위자들이며, 이들은 정책에 대한 합의를 조정하고자 하는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소통적 담론 영역의 행위자는 “일반 대중에게 정치적 아이디어를 제시, 숙의 및 정당화하는 데 관여하는 개인과 집단”인 정치 행위자들이다(Schmidt, 2008: 310). 정치 행위자는 선거 과정, 정책 논쟁, 정책 포럼 등에 참여하는 정치 지도자일 수도, 풀뿌리 조직 및 사회 운동의 상향식 담론적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시민 사회의 구성원일 수도 있다(Schmidt, 2010: 3-4).

슈미트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거나 이슈가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지 못할 경우, 새로운 아이디어는 정책 커뮤니티의 폐쇄적인 토론의 일부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Schmidt, 2008: 311). 본 논문에서 다루는 성소수자 이슈의 경우 이와는 반대로 조정적 담론 영역에서 정책 입안자 간에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아직은 소통적 담론 영역에서 사회단체들의 담론적 실천에 주로 머무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성소수자 인권이 조정적 담론 영역에서 아직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은 현재 여건을 고려하여 소통적 담론 영역에서 정치 행위자들 사이의 담론 경합을 통해 오일 정신이 어떻게 재해석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비록 이성

애규범성에 대한 저항 정신으로서의 오월 정신이 정책적 논의와 제도적 실천을 통해 구현되는 부분이 미진하더라도, 최소한 소통적 담론 영역에서는 기존 오월 정신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희진(2022: 171-172)의 지적대로 “재해석은 기존의 의미를 해체함으로써 의미를 생산, 확대, 다양화하는 과정이다.” 정책과 같은 공식적 규칙의 변화에 제도적 변화를 국한할 경우 규범, 인식과 같은 비공식적 제도의 변화를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소통적 담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기존 해석의 변화 역시 주요하게 분석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회운동 행위자가 오월 정신을 재해석하는 소통적 담론 영역은 진공상태가 아니다. 벤포드와 스노우(Benford & Snow, 2000: 625)의 지적처럼 활동가들이 사회 문제와 그 원인, 해결책을 규정하는 집합행동 프레임의 발전, 생성, 정교화 과정은 경합적 과정이다. 사회운동 프레임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는데 그 도전 중 하나는 바로 반대자들의 대항 프레임이다(Benford & Snow, 2000: 625). 사회운동이 추구하는 변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항 프레임을 통해 사회 운동이 생성하는 진단 및 처방 프레임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Benford & Snow, 2000: 626). 메이어와 스타겐보그(Meyer & Staggenborg, 1996: 1632)가 지적하듯이 특정 사회운동에 반대하는 반-운동(counter movement)은 단지 기존 운동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다. 일단 반-운동이 조직되고 나면, 사회 운동과 반-운동은 상호적으로 반응하는 동학을 형성한다. 성소수자 인권 운동도 이러한 행동주의와 반-행동주의의 동학에서 예외가 아니다. 스톤(Stone, 2016)에 따르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개신교 우파의 반응적, 선제적 반대는 성소수자 운동 목표와 프레임, 동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더구나 개신교 우파와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경합이 벌어지는 소통적 담론 영역에서 이성애규범성은 담론적 기회구조로 작동하면서 비규범적 아이디어를 담론 경합 과정에서 주변화 시킬 수 있는 권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매케이(Mackay, 2011: 192)가 지적하듯이 “권력은 담론을 통해 특정 관계 구성을 지배적인 것으로 고정

하고, 대항 담론⁴⁾을 소외시키거나 배제함으로써” 성평등을 추구하는 행위자의 행위성을 제약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이성애규범성이 권력으로 작동하는 불리한 담론적 조건 속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기회구조로 삼으려는 개신교 우파에 맞서 어떻게 오월 정신을 재해석하는지 주목하였다. 소통적 담론 영역에서 행동주의와 반-행동주의가 충돌하는 지점에 착목할 때 5·18정신이 확장되는 양상 역시 두껍게 분석할 수 있다.

2. 연구 방법

5·18정신이 소통적 담론 영역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담론적 실천을 통해 젠더화되고, 이성애규범적인 담론과 불화하는 의미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지역 시민사회 운동단체들의 성명서, 입장문, 논평, 인터뷰, 기자회견문, 보고서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광주여성민우회나 광주인권지기 ‘활짝’과 같이 지역에서 성소수자 의제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사회단체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⁵⁾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4) 여기서 대항 담론은 보수적 성격을 지니는 반-행동주의 담론이 아니라 지배 담론에 저항하는 페미니스트 담론을 의미한다.

5) 서울지역의 경우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체들의 홈페이지나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같은 연대체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들의 단독 성명서나 공동 입장문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용이하다. 반면 광주 지역의 경우 기존 시민사회단체들이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성명을 발표해 오고 있는데 이들 각자의 홈페이지에는 공동 성명서가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관련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었다.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라는 광주 지역 연대체의 경우도 성명서가 올라오는 별도의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관련 언론 보도 검색을 병행하면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한 “광주인권현장해설서”(광주광역시, 2012), “제3기 광주광역시 인권 증진 및 인권 도시 기본계획 수립”(광주광역시, 2022), “제3기(2023~2027)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안)”(광주광역시 민

이지(www.kinds.or.kr)를 통해서 관련 기사를 수집하였다. 검색 키워드로는 ‘광주’, ‘성소수자’⁶⁾를 검색하였다. 검색어를 5·18로 하지 않고 광주로 폭넓게 잡은 이유는 5·18정신이 확장되는 담론적 맥락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광주 지역 성소수자 운동의 전개 과정과 성소수자 의제가 이슈화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검색된 기사 중에서 다시 5·18이나 오월 혹은 광주 정신, 인권도시, 광주를 언급한 기사들을 추렸다. 또한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해 온 광주인(www.gwangjuin.com)과 광주드림(www.gjdrream.com) 같은 지역 진보 언론의 경우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보도를 직접 검색하였다. 특히 이들 언론의 경우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서 전문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홈페이지에 올라오지 않은 성명서나 입장문을 수집하는 데 용이하였다. 이를 통해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 언론은 아니지만 지역의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서도 상세한 보도를 해온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와 같은 온라인 언론 보도의 경우도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기사를 검색하였다. 반-성소수자 운동을 상세하게 보도해 온 크리스천투데이(www.christiantoday.co.kr), 기독교타임스(www.kdtimes.net)와 같은 보수 개신교 언론의 홈페이지 역시 반-성소수자 운동의 구체적 활동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기사를 검색하는 데 활용하였다. 주된 분석 기간은 지역 사회에서 성소수자 이슈가 시작된 2014년부터 현재(2023년 10월)까지로 이 기간에 5·18정신이 재해석되는 담론적 과정을 추적

주인권과, 2022)와 같이 시에서 작성한 문서의 경우 해당 홈페이지(광주시 홈페이지 & 세계인권도시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하거나, 해당부서(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에 직접 문의하여 수집하였다.

- 6) “성소수자”로 검색이 안 되는 기사는 “동성애”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다양한 성소수자 정체성과 이슈가 동성애로 환원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개신교가 이를 “동성애 조장”의 문제로 규정하는 담론적 전략을 주되게 구사하는 상황에서 성소수자 이슈가 언론에서 동성애 이슈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소수자 운동이 생성한 담론과 함께 개신교 우파의 담론 역시 분석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전개 과정과 담론 전략은 반-성소수자 운동과 같은 반-행동주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소수자 이슈에서 오월 정신을 명시적으로 인용하면서 오월 정신을 운동의 담론적 자원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2014년 개신교 우파에 의해 먼저 이루어졌다. 다음에 이어질 3장에서는 개신교 우파가 반-성소수자 운동에서 어떻게 오월 정신을 규정하였는지를 다루었다. 4장에서 광주 지역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어떻게 대항 담론을 형성하면서 오월 정신을 (재)규정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III. 반-성소수자 운동의 오월 정신 이성애규범화하기

1. 이성애규범적 질서의 수호로 오월 정신 규정하기

오월 정신에 대한 개신교 우파의 극우적 해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했던 담론적 배경이 무엇인지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신교 우파의 반동적이고 이성애중심적 해석이 등장하기 전부터 이성애규범성의 토대 위에 5·18항쟁의 기억과 정신을 구성하는 실천이 수행되었다. 정경운의 지적대로 5·18항쟁은 “남성은 ‘총을 든 시민군’의 형상에, 여성은 ‘주먹밥을 지원했던 어머니’의 형상”으로 재현되는 경향을 보여왔다(정경운, 2021: 3). 국립5·18민주묘지의 대표적 조형물인 <무장항쟁군상>과 <대동세상군상>은 이러한 젠더화된 형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정경운, 2021: 3). 주류 5·18서사는 여성을 국가 폭력을 고발하는 훼손된 신체 이미지로 동원하거나, 여성의 행위성에 주목하더라도 여성의 역할을 젠더화된 위치에 가두는 한계를 보였다(김영희, 2018: 155).⁷⁾ “시민군의 도청

7) 동시에 5·18항쟁에 대한 젠더화된 재현에 대한 대항 담론으로 5·18을

사수가 영웅적인 과업으로 역사에 기록되는”데 반해 “항쟁의 기억을 안고 조용하게 일상을 살아낸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담론장 밖에 흩어져” 왔다(정미경, 2023: 62). 5·18을 상징하는 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 역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과 들불야학 활동가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에 헌정된 노래gut ‘넋풀이’에 수록된 마지막 곡으로써 이성애규범적 추모 실천에 기대고 있다. “기억의 노동 분업”⁸⁾이 수행되는 다양한 영역에서 5·18에 대한 이성애규범적이고 가부장적인 재현이 수행되어 온 것이다. 5·18에 대한 지배적 재현에서 이미 성에 대한 이원론적이고 위계화된 규정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성애규범성과 오월 정신을 절합하려는 개신교 우파의 극우적 해석은 ‘새로우면서도 새롭지 않은’ 담론의 성격을 지닌다.

그렇다면 5·18에 대한 ‘낯설면서도 친숙한’ 이성애규범적 규정을 개신교 우파가 처음 제기한 것은 언제였을까? 앞서 언급한 2018년 퀴어문화축제가 광주에서 개최되기 전부터 보수 개신교를 주축으로 5·18정신과 반동성애 담론을 접하려는 담론적 실천이 수행되었다.

둘러싼 기억 투쟁에서 그동안 주변화되거나 비가시화되었던 여성 목소리와 경험을 통해 5·18의 기억을 재구성하는 시도들이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5·18항쟁 당시의 여성 행위성이나 젠더 기반 폭력에 주목하는 연구(강현아, 2004: 안진, 2005, 2020; 김영희, 2018; 김귀옥, 2020)들은 남성 중심적인 기억과 서사를 벗어나서 젠더적 관점에서 5·18을 다시 쓰고 있다. 비록 이러한 연구를 퀴어학으로 명명할 수는 없지만 이성애 규범성이 젠더화된 권력관계와 맞물려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 5·18에 대한 이성애규범적 재현을 교란할 잠재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8) 마갈릿(2023: 59-62)은 “기억의 노동 분업”을 통해 공유(shared) 기억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공유 기억은 개별적 기억들의 합산인 공통(common) 기억과 다르게 사람들 사이의 소통에 기반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공유 기억은 기록보관소, 기념비, 거리 이름과 같은 공동의 기억 장치를 통해 사람들 사이를 오간다. 이러한 맥락에서 5·18에 대한 공유 기억 역시 5·18에 관한 학술대회, 문학, 기록관, 기념행사, 교육 등과 같은 다양한 기억 노동 분업을 통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가 광주학생인권조례와 광주인권현장의 문제 조항을 개정해달라는 광고를 한겨레와 조선일보에 실었다. 현장과 조례 제정 당시에는 성소수자 인권이 쟁점화 되지 않았다. 2014년 갑자기 성적지향이 문제로 규정된 배경에는 각종 인권조례에 반대하는 반동성애 운동의 전국화 흐름이 있다. 특히 광고가 등장한 2014년 하반기는 서울시민인권현장의 제정과 공포가 개신교 우파의 거센 반발로 한참 쟁점이 되던 시기였다.

신문 광고를 통해 광주 지역 개신교 우파는 광주인권현장 12조와 광주학생인권조례 20조가 성적지향을 명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 조항을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조항”(홍성장, 2014)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적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통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성적 혼란을 겪지 않게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동성애 조장이라는 간명한 언설 속에는 동성애를 병리화하는 담론이 전제되어 있다. 출산이나 이성애 결혼의 맥락을 벗어난 성적 실천은 “부정되거나, 비가시화 되거나, 병리화 되거나, 악마화 되거나, 틀린 생각이나 잘못된 선택”(Jones, 2011a: 374)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담론은 성을 항상 이원적인 틀로만 파악하고, 여성적인 이성애 여성(feminine heterosexual female)과 남성적인 이성애 남성(masculine heterosexual male)만이 정상성 모델에 부합한다고 여긴다(Jones, 2011a: 371). 이러한 담론적 전략은 광주 지역 사회의 개신교 우파에만 국한된 담론이 아니라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반-성소수자 운동의 지배적 담론이었다. 개신교 우파를 주축으로 한 반-성소수자 운동은 동성애를 문제로 규정하고, 인권조례와 인권 현장을 동성애를 조장하는 문제가 있는 정책으로 정의하는 담론적 전략을 수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광주 지역 반동성애 운동의 담론적 전략이 타지역과 구별되는 점은 5·18정신을 자신들 주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담론적 근거로 삼는다는 점이다. 보수 행위자들에 의해서 여전히 5·18에 대한 부인의 정치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반동성애 운동은 흥미롭게도

5·18정신을 자신들의 담론적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동학혁명에서부터 광주학생운동, 그리고 5·18민중항쟁까지 빛나는 광주정신은 이 시대 광주시민의 자랑스러운 유산”(홍성장, 2014)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이어가기 위해서) 광주인권헌장과 광주학생인권조례 가운데 포함돼 있는 (성적 지향 차별 금지 등) 독소조항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홍성장, 2014)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금지 정책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는 오월정신을 훼손한다는 서사를 구축하였다. 개신교 우파가 반-성소수자 담론에서 오월 정신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만약 5·18이 여전히 사태나 폭동으로 여겨졌다면 개신교 우파가 이러한 담론적 전략을 구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구용(2017, 68)의 지적대로 “인권 도시, 광주”라는 호명이 가능해진 것은 “5월 운동이라는 사회 정치적 인정 투쟁(認定 鬭爭)을 통해 5·18의 명예가 회복되면서 보편적 이념인 인권과 결합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개신교 우파가 반-성소수자 담론과 오월 정신을 절합한 것은 이들 사이의 필연적 연관성보다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상징하는 5·18이라는 기호를 자신들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차용하고자 한 담론적 전략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수 운동이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진보 담론을 보수 담론과 절합하는 방식은 낯선 일이 아니다. 인권을 상징하는 5·18이 광주 지역에서 반-성소수자 운동에 적극 차용 되듯이, 서구의 반-성소수자 운동(Bob, 2014), 반-무슬림운동(Oaten, 2014, Schneiker, 2019), 극우 시오니즘 운동(Dudai, 2017)과 같은 다양한 극우운동에서 인권 담론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권의 수호자로 자신들을 위치시키고 있다. 비가시화된 권력 관계를 드러내고 지배 규범에 저항하기 위해 사용되던 인권의 언어가 오히려 현재의 헤게모니 질서를 정당화하는 데 전략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광주인권헌장과 광주학생인권조례 반대 광고 이후에 반-성소수자 담론과 오월 정신의 절합이 다시 등장한 것은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성소수자인 김조광수 감독을 초청해 강연을 개최한 2015년이

었다. “소수자라서 행복하다”라는 강연에 앞서서 개신교 우파는 강연이 열리는 5·18기념문화센터 앞에서 강연을 취소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민주 성지 광주에는 성(性)정치를 결사반대한다.”, “5·18 호국영령이 잠든 민주 성지 광주에서 동성애 강의라니”(소중한, 2015) 등의 팻말 시위를 벌였다. 당시 김조광수 감독의 강연이 광주트라우마센터 초청에 의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5·18항쟁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행사는 아니었다. 그런데도 강의 반대 주장에 5·18항쟁의 상징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담론 전략을 수행하였다. 당시 반대 집회에 앞서 광주시청 홈페이지에 “동성애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무서운 범죄”, “자녀가 항문성교를 한다고 하면 자랑스러워할 건가”(소중한, 2015) 등의 동성애 혐오 글이 다수가 올라왔다. 한채운(2016: 125)의 지적대로 반-성소수자 운동에 많이 사용하는 에이즈와 항문성교와 같은 수사는 “간단하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배치된 장치다.” 이는 개신교 우파가 “동성애”를 “항문성교”, “무서운 범죄”와 등치하고, 성소수자 인권 강의를 “동성애 강의”로 호명함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정동을 촉발하는 전략을 수행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정동과 “민주 성지” 광주의 상징성 사이의 절합을 통해 김조광수 감독의 강연이 오월 정신에 반하고 있다는 담론을 생성한 것이다.

개신교 우파가 오월 정신과 반-성소수자 담론의 절합을 처음으로 대규모 집회를 통해 수행한 것은 제1회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된 2018년이었다. 당시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는 아래와 같이 퀴어문화축제를 강하게 반대했다.

축제란 대다수의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고 기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퀴어문화축제는 그동안 도심광장과 시내 곳곳에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와 성적으로 문란한 물건들을 전시 판매하는 행태를 보여 시민들로 하여금 수많은 법적, 도덕적 논란을 야기해 왔다...다수의 국민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동성애가 문화축제라는 형식을 통해 조장되고 확산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기독타임스, 2018)

“동성애 조장”을 문제화하는 서사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해서 “문란한” 이미지를 덧씌움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정동을 촉발하는 전략에 기반하고 있다. 퀴어문화축제의 성격을 “성적으로 문란한 물건을 전시 판매”하는 행사로 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성적 지향이 명시된 광주인권헌장이나 광주학생인권조례와 같이 퀴어문화축제 역시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서사는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낙인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이를 재생산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동성애=문란한 성”이라는 등식을 적극 생성하고 있다. 또한 당시 개신교 우파는 퀴어문화축제 당일 이에 반대하는 집회를 금남로4가에서 개최하였는데 당시 이들의 타깃은 퀴어문화축제에 국한되지 않았다. 당시 반대 집회 명은 “국가인권정책(NAP) 독소조항 철폐 및 퀴어집회 반대를 위한 국민대회”(김진영, 2018)였다. 이들은 퀴어문화축제뿐만 아니라 2018년 8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김진영, 2018)할 수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주장은 성평등이라는 개념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과 같은 독소조항으로 지칭하고 각종 정책에서 추방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성소수자 배제적인 양성평등 개념을 고착화시키는 담론적 전략이다(김울튼, 2023: 102).

당시 개신교 우파는 퀴어문화축제 반대 활동과 집회에서 오월 정신 담론을 반-성소수자 주장의 담론적기회구조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사무총장은 “퀴어 축제는 퇴폐적이고 패륜적인 행사로서 기독교 정신과 5·18정신, 전통적 가치에 모두 어긋난다”(김준희, 2018)면서 “5·18 민주광장은 민주화를 위해 (광주시민들이) 피를 흘린 성스러운 곳이자 사적지인데 이런 장소에서 시민 대다수가 공감하지 않는 행사를 여는 것은 잘못”(김준희, 2018)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를 통해 오월 항쟁=성스러운 것, 퀴

어문화축제=퇴폐적인 것이라는 이원화된 등식을 생성하고, 퀴어문화축제가 오월 정신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담론 전략은 “5·18민주광장, 팬티축제 웬말이냐”(김진영, 2018)라는 개신교 우파의 피켓 문구에서 압축적으로 드러난다. 그렇다면 당시에 개신교 우파가 주장하는 오월 정신은 무엇일까? 당시 퀴어문화축제 반대를 주도한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 개신교 우파가 정의하는 오월 정신의 의미가 암시적으로 드러난다.

동성애자들이 광주를 여러 관점에서 타킷으로 삼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인권의 도시고 민주화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민주성지인 5·18광장에서 퀴어축제를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특히 민주광장은 크리스천뿐 아니라 시민의 성지다. 이곳에서 동성애 축제를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기존 전통적 가치관에 반할 뿐 아니라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다. 이 문제는 기독교뿐 아니라 건전한 가정과 사회를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 애쓰는 많은 시민들과 연대해 공동으로 대처할 것(이다). (김한영, 2018)

이러한 주장은 동성애를 문제화하는 담론에 기초하여 오월 정신을 “전통적 가치관”에 기반을 둔 “건전한 가정과 사회를 지키는” 것으로 (재)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오월 정신의 의미를 이성애규범적 헤게모니 수호와 등치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이성애규범성과 성별이분법에 기초한 질서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가정과 사회를 지키는 것으로 오월 정신을 규정한 것은 비단 개신교 우파에 국한되었을까?

2. 개신교 우파와 5·18구속부상자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반-성소수자 연대

당시 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와 5·18구속부상자회 비상대책위원회⁹⁾는 “5·18정신과 광주시민정신에 어긋난 퀴

어 집회 반박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5·18구속부상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민주 성지의 중심 5·18 광장에서 퀴어집회가 열리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고 패륜적 문화행사”이기에 “인권 평화 운운하지만, 도를 한참 벗어난 패륜적 행사가 5·18 광장에서 열리는 것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기독타임스, 2018). 이러한 주장은 퀴어문화축제를 “패륜적 행사”로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부정적 정동을 불러일으키는 개신교 우파의 담론적 전략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하지만 “5·18당사자”인 5·18단체가 반·성소수자 담론을 생성하는 것은 개신교 우파 홀로 반·성소수자 담론을 생성하는 것과는 다른 일이었다. 당시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은 퀴어문화축제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 의해 언어적 폭력을 경험하였는데 당시 지역 활동가는 다음과 같은 목격담을 전하고 있다.

“어라, 0자 인 줄 알았더니만 아니네, 0자 0자.” 조롱 섞인 말을 악담처럼 퍼붓는 그 사람의 입에서 “거기가 어딘 줄 알고, 너 같은 것이 있어. 나 5·18 당사자야”라는 말이 나왔다.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장면을 마주하고 만 것이다.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온 이들과의 마찰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기도 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하지만 5·18 당사자와의 마찰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고 마는 것이니... 그런 광주를 경험한 이가 가장 앞에서

-
- 9) 당시 5·18구속부상자회 비상대책위를 제외하고 오월 단체 중에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서 별도의 입장을 내거나 가시적인 대응을 보였던 단체는 없었다. 개신교 우파와의 담론적 연대를 맺은 단체는 5·18구속부상자회 비상대책위를 제외하고는 없었다. 따라서 당시에 오월 단체가 반·성소수자 입장을 보였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동시에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퀴어문화축제를 옹호한 오월 단체 역시 부재했다. 이는 대다수의 오월 단체에서 성소수자 이슈가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차별과 배제를 받고 있는 타지인에게 ‘너가 왜 그 자리에 있
냐’는 질문은 그러므로 잔인했다. (김미리내, 2018)

“거기가 어딘 줄 알고 너 같은 것이 있어”라는 간명한 말은 5·18
항쟁이 무엇이고, 5·18정신이 어떤 것인지 정의할 수 있는 사람만
발화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주장은 5·18 당사자성을 5·18항쟁
당시 참여자들로 제한하면서 5·18항쟁을 해석하고, 5·18정신을 수행
할 주체들을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다. 퀴어문화축제 당시 5·18구속
부상자회 비상대책위가 5·18항쟁의 상징인 구도청 앞에 내건 “민주
성지 광주에서 동성애자 문화행사 웬 말이냐?”(조지연, 2018)라는 현
수막은 단적으로 퀴어문화축제가 오월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담론
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담론은 차별받고 억압받는 집단으
로서의 소수자성을 부인하고 “너 같은 것”이라는 지칭을 통해 성소
수자에 대한 낙인을 재생산하고 있다.

제1회 퀴어문화축제 반대 이후에도 제2회 퀴어문화축제 반대나 차
별금지법 반대와 같은 개신교 우파의 반-성소수자 운동은 지속되었
지만, 오월 정신과 반-성소수자 담론을 절합하는 가시적인 담론은 생
성되지 않았다. 5·18구속부상자회 역시 이후에 반-성소수자 관련해
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거나 성명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둘 간의 가시
적인 반-성소수자 담론 연대는 가장 많은 화제가 되었던 제1회 퀴어
문화축제 이후 발견되고 있지 않다. 이는 개신교 우파에게 5·18항쟁
이 지속적 관심이 아니듯, 오월 공법단체에도 성소수자 이슈가 중요
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개신교 우파의 관심 자체
가 5·18항쟁이 아니라 5·18항쟁이 가진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상징
성에 대한 전략적 전유라는 점에서 이들의 5·18에 대한 관심은 “휘
발적 관심”이라 부를 수 있다. 이러한 휘발적 관심의 특징은 어느 이
슈든 간에 필요하면의 상징성을 특정 주장과 절합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일례로 2021년 광주지역 개신교 우파는 코로나 시기 “군사독재
타도했더니 코로나 독재인가”(송경호, 2021)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

하였다. 이때 개신교 우파는 정부의 코로나 집합 제한 조치에 대한 반대 활동을 “신군부의 압제에 항거한 5·18 민주화 선열들의 피의 호소”(송경호, 2021)로 규정하였다. 오월 정신이 “코로나 독재”에 대한 저항으로 의미화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오월 정신이 “동성애 독재”¹⁰⁾에 대한 저항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2018년 제1회 퀴어문화축제 이후 뜸해진 오월 정신과 반-성소수자 담론 사이의 절합은 사라진 담론이라기보다는 언제든지 정치적 필요에 따라 활성화가 가능한 “잠복적 담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IV. 광주지역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오월 정신 재해석하기

1. 반-성소수자 담론을 문제화하기

2014년 광주에서 성소수자 인권이 처음으로 이슈화된 이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신교 우파의 반-성소수자 담론에 대항하는 담론을 지속해서 생성하였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전면적으로 다루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한 것은 2014년이 처음이었다. 성소수자 운동단체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존 시민사회단체들이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서 처음부터 공동으로 대응하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당시 개신교 우파의 반발로 성적지향이 삭제되거나, 삭제될 위기에 처했을 때 서울에서 성소수자 단체들이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중심으로 연맹체를 결성하여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지 성명서, 공동 성명서, 연대 방문 등을 통해 결합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서울이 성소수자 단체 주도형 대응 방식을 보였다면 광주와 같

¹⁰⁾ 개신교 우파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에 반대하는 개인의 양심과 표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이를 “동성애 독재”법으로 규정해오고 있다.

은 비서울 지역의 경우 성소수자 의제를 전면적으로 다루지 않아 왔던 기존 지역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대응 방식을 보인 것이다. 당시 성명서를 통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38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인권회의는 개신교 우파의 성적 지향 삭제 요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였다.

광주 시민·학생들의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 광주인권현장과 학생인권조례는 일부 기독교 단체들로 인해 다시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특히 <조선일보> 광고에 성소수자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왜곡되고 과장된 허위사실을 담은 내용을 게재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관련 기관을 압박하기 위해 대규모 실행행사를 계획하는 등 인권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광주인권회의, 2014)

위 주장은 인권 담론에 기반을 둔 담론적 전략으로 개신교 우파의 주장을 “인권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주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서울학생인권조례나 서울시민인권현장에서 성적지향이 삭제될 위험이 처했을 때 공통으로 등장하던 담론적 전략으로 반-성소수자 주장을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반인권적 행태로 규정한다. 이러한 담론적 전략은 성소수자 이슈를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개신교 우파의 반-성소수자 담론을 반박하거나 이에 공모하는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담론은 반-성소수자 담론에 대한 비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에 성소수자의 현실을 드러내고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에는 한계적이다. 따라서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통해 또 다른 대항 담론을 생성하였다.

한국 그리고 광주의 성소수자 인권 현실은 여전히 처참하다. 특히 많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학교와 또래집단에서 놀림, 괴

롭힘, 폭력에 직면하고 있다.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외면 받는 성소수자들도 적지 않으며, 직장에서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단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폭력과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보호 장치는 거의 없으며, 행여나 성소수자들이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고 성소수자의 존재와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시급한 과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성적 지향 보장을 위한 내용을 담은 광주인권헌장과 학생인권조례는 존속되어야 하고, 국가기관이 더욱 앞장서서 성소수자의 차별과 혐오의 위험성을 알려야 하며, 성적 다양성과 자기결정권 존중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출발이라는 것을 함께 인식해야 한다. (광주인권회의, 2014)

이러한 주장은 성소수자들이 겪는 다종다양한 차별과 폭력을 가시화하고, 살만한 삶의 조건을 구축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개신교 우파에 대한 반대를 넘어서 앞으로 만들어야 할 사회의 상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성소수자의 살 수 없는 삶을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차별과 혐오가 없는 광주를 만드는 것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버틀러(2022)는 살만한 삶을 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살만한 삶을 요구한다는 것은 삶이 살 수 있는 힘을 갖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무엇이 삶을 살만하게 만드느냐는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조건에서는 분명 살만하지 않다는 것, 즉 빈곤, 수감 또는 궁핍, 동성애 혐오, 트랜스젠더 혐오, 인종 차별적 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을 포함한 사회적, 성적 폭력 등 살기 힘든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다. (Butler, 2022 : 18)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살만한 삶에 대한 요구는 성소수자의 삶을 살만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조건들을 문제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버틀러(Butler, 2009: ii)는 불안정성(*precarity*)이라는 개념을 통해 “특정 인구가 사회적, 경제적 지원 네트워크의 실패로 인해 고통 받고 부상, 폭력, 사망에 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정치적으로 유발된 상태”에 놓여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앞서 인용한 광주인권회의의 성명서 역시 “학교와 또래 집단에서 놀림, 괴롭힘, 폭력”,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외면 받는” 것, “직장에서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는 일” 등과 같은 예시를 통해 성소수자 삶의 불안정성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안전”과 “행복”이 이성애규범적 질서 위에서 성소수자 배제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삶으로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¹¹⁾

11) 살만한 삶의 조건을 구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는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법제화이다. 전 세계적으로 성소수자 권리 법제화의 근거가 되는 주된 담론은 성소수자 권리를 인권으로 규정하는 담론이다. 이러한 담론적 전략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법적, 정치적 성과를 거두었다. 베이즐리(Baisley, 2016: 161-162)에 따르면 특히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인권 규범은 기존 국제 인권 체제와의 연결고리를 통해 이점을 누리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규범적 범위가 국제 가이드라인(구속력은 없지만 국가들에 널리 권장하는 기준)으로 강화되었으며, 기존 국제 인권법과 연계되어 일부 신흥 규범은 사실상 국제 기준(관련 조약을 비준한 국가에 구속력이 있는 규칙)이 되어가고 있다(Baisley, 2016: 162). 성소수자 권리를 인권으로 규정하는 것이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냈고 궁극적으로 운동을 성공적이게 했다(Holzhaecker, 2014). 하지만 이러한 성소수자 인권 담론은 머터스(Mertus, 2007: 1063)의 지적대로 성소수자 범주를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경합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성적 정체성의 고정화된 범주를 전제할 수 있는 위험을 지니기도 한다. 실제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접근은 성별정체성 및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받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지만, 정체성을 고정화함으로써 차별금지를 덧셈 모델로 접근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Jones, 2011b: 155). 이는 살만한 삶의 조건을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기

하지만 2014년 당시에 이러한 대항 담론과 오월 정신이 절합되지는 않았다. 반 성소수자 광고는 오월 정신을 적극 차용하여 이를 이성애규범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러한 광고를 반박하는 성명서에는 오월 정신이 전혀 언급되지는 않았다. 이후 2016년에 광주학생인권조례 정책 토론회에서 개신교 우파 인사들을 토론자로 초청한 것에 항의한 운동도 있었지만, 이 당시에도 오월 정신과 성소수자 인권 담론 간의 절합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에 성적지향을 문제화하고 삭제하려는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에서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¹²⁾가 구성되었다. “평등을 삭제하려는 이들에 맞서”(광주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2022)기 위해 지속적 연대체가 결성된 것은 사안별 대응을 넘어서 지역에서 성소수자 인권 의제 설정이 더욱 조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2. 오월 정신의 퀴어한 확장: “죽음을 넘어, 시대의 차별을 넘어”

오월 정신과 성소수자 인권 담론이 처음 절합되어 나타난 것은 2017년이였다. 당시 개신교 우파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헌법 36조 1항에 있는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으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었다. 당시 광주에도 “동성애 합법화 개헌 반대” 집회가 개최되었는데, 특이점은 이 집회에 다수의 지역 정치인 역시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광주 시민사회단체는 개신교 우파의 집회와 정치인들의 동참을 “‘사회적 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데 앞장선...반인권적 행태”(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외, 2017)라고 비판하면서 반-성소수자 담론을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였다. 특히 당시 정의당 광주시당은

존 범주를 본질화 하기보다는 이러한 범주를 생성해 내는 권력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12) 당시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참여 단체는 광주인권지기 ‘활짝’,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광주녹색당, 노동당 광주시당, 광주여성민우회 등이다.

반-성소수자 담론에 대한 대항 담론을 만드는 과정에서 오월 정신과 성소수자 인권 담론을 아래와 같이 명시적으로 절합하였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에서 개최된 반인권집회에 참여한 국민의당 소속 정치인들에게 심각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국민의당은 이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의 정체성을 배반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시정슬로건에서조차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007년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조례’를 제정함으로써 5·18민주화 운동을 과거 한때 지나간 역사로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하는 미래비전으로 만들어 가자고 시민들이 합의한 것입니다...사회 안의 특정한 사람들을 배격하고 혐오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2차대전 당시 독일 나치는 유대인과 함께 동성애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여 집단수용하고 학살했습니다. 한때 군부독재에 저항했던 광주와 전라도 사람들을 폭도라고 부르며 소외시켰던 경험의 집단적 피해자이기도 한 광주에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인권·평화 도시의 시민이라는 광주시민의 정체성을 배반하고, 인권의 지평을 넓혀왔던 자신들의 과거를 배신한 국민의당은 광주시민과 성소수자 시민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정의당 광주시당, 2017)

위 성명서는 “집단적 피해자”인 오월 광주 사람들과 “잠재적 범죄자”로 여겨지던 성소수자들 사이의 공통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성애 규범성과 성별이분법에 비순응적이라는 이유로 취약한 삶의 조건에 놓인 성소수자와 군부독재에 저항한다는 이유로 폭도로 불렸던 오월 광주 사이의 교차점을 바탕으로 오월 정신을 키워한 존재들이 경험하는 폭력과 차별에 저항하는 정신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전남대 성소수자 동아리 라잇온미의 성명서에도 이와 유사한 담론이 생성되고 있다. 라잇온미는 “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반대한다’고 했던, 지금도 기독교 세력들이 ‘정상인’으로 되돌리겠다며 폭행을 가

하고 욕하는, 존재가 밝혀졌을 시에 해고당하고 절연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하소연할 곳 없는 성소수자가 1980년대의 광주와 다르었다”(양유진, 2017)고 주장하였다. 특히 “기독교 세력과 국민의당 의원들, 정치인들이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폭행·차별·혐오를 정당화하는 2017년의 계엄군”(양유진, 2017)이라면서 “성소수자의 자살률이 높은 것은 당신과 같은 이들이 존재를 부정하는 ‘간접 살해’를 하기 때문”(양유진, 2017)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인용한 성명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주장 역시 현재 성소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성소수자 존재에 대한 부정과 혐오가 1980년 계엄군에 의해 자행되었던 폭력과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신교 우파와 이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을 “2017년의 계엄군”에 비유하고 있다. 성소수자의 취약한 생존 세계와 오월 광주 시민이 경험했던 폭력과 낙인 사이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담론적 실천은 2018년 광주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심불을 통해서 재현되기도 하였다. 당시 제1회 광주퀴어문화축제의 심불을 무지개 햇불로 정하였는데, 퀴어문화축제 운영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5·18 당시에 희생된 시민들, 시민들에게 주먹밥을 날랐던 여성들, 당시 전국적으로 고립된 광주 모두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지금의 성소수자가 처한 현실과 닮아”(김우리, 2018)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지개 햇불은 오월 광주 시민과 성소수자 사이의 접점을 바탕으로 오월 정신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대항하는 것으로 새롭게 재현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1회 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개신교 우파의 조직적 반대 운동이 벌어진다. 이에 광주 시민사회단체들이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지지하는 공동 입장을 밝히는데, 이 과정에도 성소수자에 대한 현재의 폭력과 차별에 비추어 오월 정신을 다시 쓰려는 담론적 실천이 수행되었다.

80년 5월의 광주는 모두가 함께 어울려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 대동 세상을 위해 피 흘리며 쓰러져간 오월영령이 잠든 곳이

다. 특히 전라도와 광주에 오랜 시절 억압받고 차별받으며, 지역적 소수자로서 살아왔다. 우리는 차별과 배제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다. 그렇기에 광주는 특히나 공동체 속의 모든 소수자를 아우르고, 함께 나아가야 할 당위가 있다...어떠한 이유로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더 나은 광주를 찾아가기 위해, 우리는 광주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할 것이다. (광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외, 2018)¹³⁾

위 공동 성명서 역시 억압받고 차별받아 온 광주와 전라도의 지역적 소수자성을 강조하고 있다. “차별과 배제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는 오월 광주의 이러한 퀴어한 정체성은 현재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이러한 담론은 당시 오월 정신을 이성애규범성과 등치하였던 개신교 우파의 반-성소수자 담론에 대항하여 모든 소수자를 아우르는 것이 오월 정신의 추구하는 대동 세상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오월 정신의 확장된 의미는 2019년 제2회 퀴어문화축제에서도 그대로 재생산되었다. 당시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언론 인터뷰에서 “광주의 5·18정신은 소수자를 포용하는 공동체 정신이다. 이번 퀴어문화축제가 광주 정신을 더욱 빛내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양가람, 2019). 이렇듯 퀴어

13) 당시에 민주노총 광주지부를 비롯해 대다수의 지역 단체들이 오월 정신에 근거해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성명서 연명은 명시적으로 연대를 표명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중요한 실천일 수 있다. 하지만 성명서 연명을 넘어서서 광주 지역에서 성소수자 인권 의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단체는 많지 않다. 이는 다수의 지역 단체에서 성소수자 인권이 주요 사업을 통해 실천되기보다는 담론적 연대 수준에서 실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인권지기 ‘활짝’이나 광주여성민우회와 같은 인권, 여성 단체의 경우 지역의 인권 의제와 성평등 과제의 범위를 성소수자 인권으로까지 확장하는 활동들을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다. 이는 지역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1) 다수 단체의 느슨한 연대와 2) 소수 단체의 집중적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화축제는 성소수자와 오월 광주를 연결하는 공통된 소수자성을 근거로 오월 정신의 의미를 확장하는 주요한 사건이자 실천이 된다.

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2021년 아이다호(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성명서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오월 정신을 확장하였다. 아이다호 행사가 5월 17일이라는 점은 오월 정신과 성소수자 인권을 보다 용이하게 절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다.

광주퀴어문화축제는 죽음과 시대의 차별을 넘어서는 세상을 바랍니다...그러나 올 해는 성소수자에 대한 더욱 거세진 혐오를 체감하는 해입니다. 올 해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때, 변희수, 김기홍, 이은용이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사회는 그들을 ‘그냥 사람’이라고 기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지난간 ‘또 다른 우리’이자 ‘그냥 사람’이었던 그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제정을 통해 우리의 인권이 지켜지는, 더 이상의 혐오와 차별이 아닌, 외면 받는 존재가 아닌, 같이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의 인권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5·18의 전야제인 오늘, 우리는 그 의미를 다시 되새깁니다. 죽음을 넘어 아픔을 넘어 희망을 꿈꿨던 5·18을 되새깁니다. 오늘은 아이다호입니다. 우리는 질병이 아니며, 우리는 존재하며,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광주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퀴어문화축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세상을 상상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당당한 일상을,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해 인지하는 광주를, 죽음과 차별을 넘어선 사회를 바랍니다. 5·18이 그랬듯 죽음을 넘어 아픔을 넘어 희망을 꿈꾸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광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2021)

위 성명서는 “죽음을 넘어 아픔을 넘어 희망을 꿈꿨던 5·18”과 성소수자가 더 이상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5·18항쟁에 관한 대표적 저작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변주하여 현재 지향하는 세계의 모습을 “죽음

과 시대의 차별을 넘어서는 세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같은 해에 열린 제3회 퀴어문화축제¹⁴⁾의 슬로건 역시 “광주 정신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맞서자”라는 의미를 담아 “죽음을 넘어, 시대의 차별을 넘어”(양가람, 2021)로 정해졌다. 이러한 변주된 슬로건은 5·18정신의 현재성을 압축적으로 나타낸다. 이성애규범성과 성별이분법에 기반을 둔 다양한 차별과 폭력에 저항하고, 이를 통해 성소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퀴어 죽음 정치(Lamble, 2013)를 넘어서는 것이 5·18정신 계승임을 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3. 성소수자 친화적 인권 도시 담론을 통해 오월 정신을 암시적으로 확장하기

오월 정신의 확장은 명시적인 방식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오월 정신이나 5·18항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오월 정신을 암시적으로 성소수자 인권과 절합하는 담론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2022년 퀴어문화주간을 앞두고 광주 시민사회단체들이 발표한 공동선포문은 광주시가 지향하는 인권 도시의 의미를 성소수자 친화적 공간으로 확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선포문(광주퀴어문화주간 준비위원회 외, 2022)에서 “우리는 삶의 터전인 광주가 성소수자 시민의 존엄과 자유, 평등, 연대의 원칙을 실현하는 인권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성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해 실효적인 인권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광주인권헌장에 명시된 권리가 성소수자 시민에게도 모두 보장될 수 있도록 시와 의회가 책임을 다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선포문에는 앞서 언급한 성명서들과는 다르게 오월 정신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광주의 인권 도시라는 표상이 5·18항쟁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인권 도시 의미의 확장은 암시적으로 오월 정신의 의미 역시

14) 3회 광주퀴어문화축제는 광장 행사가 아니라 실내 영화제 상영 형태로 진행되었다.

확장시킨다.¹⁵⁾ “광주의 도시 정체성이 5·18이라는 역사로부터 가장 크게 규정 받고 있음을”(은우근, 2009: 71) 고려한다면, 광주 정체성을 규정하는 담론적 실천은 필연적으로 오월 정신을 규정하는 담론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오월 정신을 성소수자 인권과 암시적으로 절합하는 담론이 소통적 담론 영역에서 시민사회 단체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을 통해서도 생성되었다는 점이다. 전남일보는 2019년 제2회 퀴어문화축제를 맞아 신문의 제호를 무지개색으로 변경했다. 당시 전남일보 편집국장은 “광주퀴어문화축제를 맞아 성소수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고 퀴어도 동일한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포용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번 제호를 쓴 것”이라면서 “특히 광주는 민주와 인권에 관련한 이미 광주만의 도시가 아니지 않나. 그렇기에...한 달여 전부터 논의해 이번 제호를 제작했다”(광주전남기자협의회, 2019)는 입장을 밝혔다. 비록 전남일보의 이러한 입장은 5·18항쟁과 성소수자 인권을 직접적으로 연결 짓고 있지는 않지만 5·18항쟁이 상징하는 민주와 인권의 의미를 성소수자 인권 존중으로까지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하나 눈여겨 볼 점은 조정적 담론 영역에서도 이러한 인권 도시의 의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이 작성한 “제3기 광주광역시 인권 증진 및 인권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보고서(광주광역시, 2022: 255)는 “성소수자 인권보호체계 구축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성소수자 실태조사 및 인

15) 같은 해에 세계인권도시포럼 <성 소수자> 주제 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되기도 하였다. 이 행사 역시 지역 활동가들이 주제 회의의 공모 신청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주축이 되어 처음으로 [광주 성 소수자 비(秘)현실 보고서]라는 지역 성소수자 인권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실천들을 통해 활동가들은 인권 도시의 의미를 성 소수자 친화적 도시로 변모시키고 있다. 이러한 실천들은 인권 도시 의미를 재규정함으로써 오월 정신의 의미를 암시적으로 확장하는 담론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권 증진 정책 수립”, “공무원 및 보건의료 종사자 대상 성소수자 인권 교육”,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 상담 지원”, “퀴어문화축제 공공장소 사용 개방”을 추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광주시는 “제3기(2023~2027)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안)”(광주광역시 민주인권과, 2022: 22)에 “성소수자 인권 보호체계 구축”을 포함하였고, 세부 항목에 “소수문화와 소수성 등을 편견 없이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막아내는 정책은 문화다양성을 증진 정책의 주요 대상”이라는 점과 “성소수자 실태조사 및 인권증진 정책 수립”을 명시하였다. 정책 계획이 아직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러한 정책 계획이 정책 집행으로 직결되는 것도 아니기에 이러한 기본 계획의 변화가 광주가 성소수자 친화적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지향을 명시한 광주인권헌장 제정 10년 만에 지방 정책연구기관과 지방 정부가 모두 성소수자 인권보호 체계 구축을 추진 과제로 제시한 점은 소통적 담론 영역에서 시민단체들에 의해 주로 논의되었던 성소수자 친화적 인권 도시 담론이 조정적 담론 영역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위 연구 보고서에서 성소수자 인권 정책(문화 다양성)의 근거로 삼고 있는 광주인권헌장은 5·18정신 계승 취지로 518자로 이루어진 전문과 5장 1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헌장 전문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광주광역시, 2012: 7)을 명시하고 있다. 광주의 성소수자 인권 정책이 광주인권헌장에 기반하고, 이러한 광주인권헌장이 오월 정신 계승 취지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정적 담론 영역에서 인권 도시 의미와 오월 정신의 의미는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월 정신을 명시적 혹은 암시적으로 성소수자 인권과 절합하는 지역 시민사회의 실천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2023년에도 계속되고 있다. 예컨대 지역 인권 단체가 2023년에 발간한 <들리지 않은 외침>이라는 지역 내 소수자 구술사에서는 “광주 정신을 계승해 성소수자들의 인권 실태 조사를 한다든지 성소수자들의 시민의 권리와

육구에 대해 살피는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광주인권지기 활짝 & 광주광역시, 2023: 101)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광주 지역 모든 성소수자 인권 활동에서 오월 정신이 이처럼 언급되거나 강조되는 것은 아니다. 2023년에도 퀴어 영화 정기 상영회, 성소수자 인권 도서 함께 읽기, 가족구성권 카드 뉴스, 혼인 평등 대중 강연, 지역 내 혐오-차별 모니터링과 같은 다양한 실천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들에서 오월 정신에 대한 담론은 부재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를 차별과 혐오가 없는 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한 일련의 실천들은 이성애규범성에 대한 저항으로 재해석된 오월 정신이 상징적 선언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에서 실제 구현될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V. 맺는 말

본 논문은 5·18정신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담론 경합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에 착목하여 소통적 담론 영역에서 광주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오월 정신을 어떻게 (재)해석하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오월 정신의 확장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은 오월 정신을 이성애규범적 질서 수호로 정의한 개신교 우파였다. 하지만 성소수자 인권 운동과 비교해서 지역의 개신교 우파의 오월 정신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이기 보다 휘발적인 양상을 보였다. 이는 개신교가 5·18 자체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5·18이 가진 상징성을 담론적 기회구조로 전유하고자 함을 보여준다. 5·18항쟁이 가진 상징적 힘이 유지되는 한 오월 정신은 언제든지 반-성소수자 담론뿐만 아니라 반-난민, 반-이주민 담론과 같은 여러 극우 담론에 의해서도 소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오월 정신을 둘러싼 담론 경합은 앞으로 다양한 사안에서 지속될 것이며, 현재적 맥락에 따라 오월 정신을 다시 쓰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기존 질서와 지배적 담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오월 정신이 규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광주 지역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국가폭력에 저항하고 희생된 오월 광주 시민과 이성애규범성과 성별이분법에 비순응하고 다양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성소수자 사이의 공통점을 강조하는 담론적 전략을 수행하였다. 성소수자와 오월 광주가 공유하는 소수자성을 기반으로 오월 정신의 의미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함께 저항하고 살만한 삶의 조건을 구축하는 것으로 (재)정의하였다. “광주 정신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맞서자”는 의미를 담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차별을 넘어”라는 광주퀴어문화축제 슬로건은 이러한 오월 정신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오월 정신에 대한 명시적 재해석 외에도 5·18항쟁과 연동되는 인권 도시의 의미를 성소수자 친화적 도시로 (재)정의하는 실천들을 통해 오월 정신을 암시적으로 확장하였다. 이러한 담론적 실천은 이행기 정의 실현을 위한 ‘광주 5원칙’ 중 하나인 오월 정신 계승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월 정신 계승을 과거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으로 국한하지 않고 성소수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폭력에 비추어 오월 정신을 재해석함으로써 5·18에 지속적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퀴어문화축제와 같이 성소수자 의제가 중심이 되는 활동에서는 이성애규범성에 대한 저항으로 오월 정신의 의미가 확장되고 있지만 5·18과 관련된 주요 행사나 공론장에서는 여전히 성소수자 인권과 오월 정신이 절합되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 “남성=시민군, 여성=주먹밥” 담론은 5·18 재현에서 여전히 강력하다. 오월 정신을 이성애규범적 질서 수호로 정의하는 개신교 우파의 실천은 “휴지기”에 있지만 이러한 담론적 실천의 바탕이 되었던 5·18에 대한 이성애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재현은 지속되고 있다. 오월 정신의 의미를 확장하는 새로운 담론과 5·18을 이성애규범적으로 재현하는 낡은 관행이 공존하는 것이다. 이는 이성애규범성과 성별이분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만 머무르지 않고 5·18 기록하기, 기억하기, 그리고 기념하기 등 전 과정에 걸쳐서 수행되어야 함을 시

사한다. 5·18에 대한 “기억의 노동 분업”이 이루어지는 전 영역에서
귀어한 관점이 주류화될 때 5·18에 대한 이성애규범적 재현 역시 변
태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접수일: 2023. 11. 20, 논문심사일: 2023. 12. 08, 게재확정일: 2023. 12. 16)

참고문헌

- 강현아. 2004. “5·18항쟁 역사에서 여성의 주체화.” 『한국여성학』 20(2): 5-40.
- 김귀옥. 2020. “5·18민중항쟁 정신을 평화운동으로 계승하고 있는 오월의 여성.” 『여성과 평화』 6: 60-80.
- 김영희. 2018. “‘5·18’의 기억 서사와 ‘여성’의 목소리.” 『페미니즘 연구』 18(2): 149-206.
- _____. 2020. “‘5·18 광장’의 ‘애국’ 담론과 ‘여성’의 비가시화: 청취의 연대가 만들어내는 ‘여성’ 발화의 장소.” 『경제와 사회』 126: 116-172.
- 김율튼. 2023. “성소수자 인권 제도 이후의 제도화 과정 분석: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40(1): 79-114.
- 김정한. 2010. “5·18 광주항쟁 이후 사회운동의 이데올로기 변화.” 『민주주의와 인권』 10(2): 161-190.
- _____. 2012. “5·18 무장투쟁과 1980년대 사회운동 —대항폭력의 과잉과 반폭력의 소실.” 『역사문제연구』 16(2): 111-133.
- 김희송. 2015. “1980년 5월 광주공동체의 의미와 현재화에 대한 고찰.” 『신학전망』 190: 62-96.
- 박구용. 2007. “서로주체의 형성사로서 동학농민전쟁과 5·18광주민중항쟁.” 『민주주의와 인권』 7(2): 5-38.
- _____. 2010. “바깥으로 나가는 역사. 5·18.” 『민주주의와 인권』 10(3): 47-80.
- _____. 2017. “5·18과 광주 인권 정책.” 『신학전망』 198:51-81.
- 아버샤이 마갈릿. 2023. 『기억의 윤리』. 박의연·오창환·추주희 옮김. 서울: 한국문화사.
- 안 진. 2005. “5·18 광주항쟁에서의 여성 주체세력의 성격.” 『광신논단』 14: 395-422.
- _____. 2020. “5·18항쟁기 여성피해 진상규명의 과제: 성폭력 피해를 중심으로.” 『인권법평론』 25: 99-157.
- 은우근. 2009. “인권 거버넌스의 실현으로서 인권도시.” 『민주주의와 인권』 9(1): 121-147.

- 정경운. 2021. “오월항쟁과 여성의 증언— ‘밥’과 ‘총’의 서사를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70: 1-46.
- 정미경. 2023. “젠더 관점으로 바라본 공공역사의 실천과 전망: 광주여성사 기반 콘텐츠 개발 및 활용을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주관. 『세계의 기억, 세 개의기록』 5·18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12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문(2023.11.30.). 47-64.
- 정희진. 2022. 『새로운 언어를 위해서 쓴다: 융합과 횡단의 글쓰기』 서울: 교양인.
- 진태원. 2023. “5·18과 불화하기.” 『민주주의와 인권』 23(2): 77-116.
- 최영태. 2005. “5·18항쟁과 평화인권운동.” 『4.3과 역사』 5: 128-143.
- 최정운. 2015. 『오월의 사회과학: 사회과학자의 시선으로 새롭게 재구성한 5월 광주의 삶과 진실』 파주: 오월의봄.
- 한채운. 2016. “왜 한국 개신교는 ‘동성애’를 증오하는가?.” 『인물과 사상』 1월호: 114-127.
- Baisley, Elizabeth. 2016. “Reaching the tipping point?: Emerg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pertaining to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Human Rights Quarterly* 38: 134-163.
- Benford, Robert, and David Snow. 2000. “Framing Processes and Social Movements: An Overview and Assess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611-639.
- Bob, Clifford. 2014. “The Global Battle over Religious Expression: Sweden’s Åke Green Case in Local and Trans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40(2): 212-229.
- Butler, Judith. 2009. “Performativity, precarity and sexual politics.” *AIBR. Revista de Antropología Iberoamericana* 4(3): i-xiii.
- _____. 2022. “A livable life? An inhabitable world? Scheler on the tragic.” *Puncta: Journal of Critical Phenomenology* 5(2): 8-27.
- Dudai, Ron. 2017. “Entryism, mimicry and victimhood work: The adoption of human rights discourse by right-wing groups in Israel.”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21(7): 866-888.
- Holzhaecker, Ronald. 2014. “Gay rights are human rights: The framing of new interpret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in:

- Andreopoulos A and Kabasakal Arat ZF (Eds). *The Uses and Misuses of Human Rights: A Critical Approach to Advocac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Jones, Tiffany. 2011a. "Saving rhetorical children: Sexuality education discourses from conservative to post-modern." *Sex Education* 11(4): 369-387.
- _____. 2011b. "A sexuality education discourses framework: Conservative, liberal, critical, and postmodern." *American journal of sexuality education* 6(2): 133-175.
- Kulawik, Teresa. 2009. "Staking the frame of a feminist discursive institutionalism." *Politics & Gender*, 5(2), 262-271.
- Lamble, Sarah. 2013. "Queer necropolitics and the expanding carceral state: Interrogating sexual investments in punishment." *Law and Critique* 24: 229-53.
- Mackay, Fiona. 2011. "Conclusion: Towards a feminist institutionalism?." in: Mona Lena Krook & Fiona Mackay (Eds). *Gender, Politics and Institutions: Towards a Feminist Institutionalism*.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Mertus, Julie. 2007. "The rejection of human rights framings: The case of LGBT advocacy in the US." *Human Rights Quarterly* 29(4): 1036-1064.
- Meyer, David. S, and Suzanne Staggenborg. 1996. "Movements, countermovements, and the structure of political opportun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1(6): 1628-1660.
- Oaten, Alexander. 2014. "The cult of the victim: an analysis of the collective identity of the English Defence League." *Patterns of Prejudice* 48(4): 331-349.
- Schmidt, Vivien. A. 2008. "Discursive institutionalism: The explanatory power of ideas and discours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1: 303-326.
- _____. 2010. "Taking ideas and discourse seriously: explaining change through discursive institutionalism as the fourth 'new institutionalism.'" *European Political Science Review* 2(1): 1-25.

- _____. 2016. “The roots of neo-liberal resilience: Explaining continuity and change in background ideas in Europe’s political economy.” *The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18(2): 318-334.
- Schneiker, Andrea. 2019. “The new defenders of human rights? How radical right-wing TNGOs are using the human rights discourse to promote their ideas.” *Global Society* 33(2): 149-162.
- Stone, Amy. 2016. “The impact of anti-gay politics on the LGBTQ movement.” *Sociology Compass* 10(6): 459-467.

[기타자료]

- 광주인권지기 활짝 & 광주광역시. 2023. 「들리지 않은 외침: 광주시민 10인 구술기록사업, 2022 인권단체협력사업.
- 광주광역시 민주인권과. 2022.12. 「제3기(2023~2027)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안)」.
- 광주광역시. 2012.8. 「광주인권헌장해설서」, (발간등록번호 55-6290000-0003 21-01).
- _____. 2022.12. 「제3기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및 인권 도시 기본계획 수립」.
- 광주인권회의. 2014.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중단하고, 광주광역시청과 교육청은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성명서], (2014.12.1.).
- 광주전남기자협의회. 2019. 『광주전남기자협의회』, 2019.11.8일자 “‘무지개 색’으로 물든 전남일보, 광주 인권 위상 높였다” http://gjpress.co.kr/module/board/board.php?bo_table=0103&wr_id=1094(검색일: 2023.11.8.).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외. 2017. “사회적 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데 앞장선 국민의당의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2017.9.6.).
- 광주퀴어문화주간 준비위원회 외. 2022. “광주퀴어문화주간 선포문”, [성명서], (2022.11.22.).
- 광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외. 2018. “인권도시 광주에서, 성소수자 인권 탄압 웬말이냐!”, [기자회견문], (2018.10.18.).

- 광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2021. “광주퀴어문화축제는 죽음과 시대의 차별을 넘어서는 세상을 바랍니다”, [성명서], (2021.5.17.).
- 광주협오문화대응네트워크. 2022. “뿔아달라 말하는 당신, ‘평등’을 공약하라!”, [성명서], (2022.4.22.).
- 기독타임스. 2018. 『기독타임스』, 2018.10.18.일자, “‘5·18 민주광장 퀴어집회 반대’ 한 목소리”, <http://www.kdtimes.net/459>(검색일: 2023.10.17.).
- 김미리내. 2018. 『광주인』, 2018.10.30일자, “[기고] 퀴어축제와 광주의 자화상(2)”,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742>(검색일: 2023.10.27.).
- 김우리. 2018. 『광주드림』, 2018.2.9일자, “‘1회 광주퀴어축제, 광주답게 해보겠습니다’”.
- 김준희. 2018. 『중앙일보』, 2018.10.22일자, “광주 5·18 광장서 첫 성소수자 축제…‘다양성 존중’ VS ‘패륜적 행사’”.
- 김진영. 2018. 『크리스천투데이』, 2018.10.22일자, “첫 퀴어축제 열려… 반대 집회에 3만명 운집”,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16990> (검색일: 2023.11.2.).
- 김한영. 2018. 『광주일보』, 2018.10.3일자, “광주 첫 ‘성소수자 축제’ 앞두고 찬반 논란”.
- 김현주. 2018. 『무등일보』, 2018.10.19일자, “5·18광장서 퀴어문화축제 열릴 수 있을까”.
- 소중한. 2015. 『오마이뉴스』, 2015.04.23일자, “‘동성애=에이즈? 그럼 이성애=성폭력인가’”,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01262(검색일: 2023.10.29.).
- 송경호. 2021. 『크리스천투데이』, 2021.2.15일자, “민주화 성지 광주에 모인 목회자들 ‘코로나 독재 웬말’”,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8202>(검색일: 2023.10.30.).
- 양가람. 2019. 『전남일보』, 2019.10.24일자, “‘밝히는 퀴어’… 무지개로 뒤덮이는 금남로”.
- _____. 2021. 『전남일보』, 2021.10.21일자, “‘차별을 넘어’… 광주퀴어문화축제 열린다”.
- 양유진. 2017. 『광주드림』, 2017.09.13일자, “‘광주 동성애·동성혼 반대 집회, ‘광주정신’ 왜곡했다’”.

- 정의당 광주시당. 2017. “광주의 정체성과 역사 부정한 국민의당은 사죄하라!”, [기자회견문], (2017.9.7.).
- 조지연, 2018. 『광주인』, 2018.10.2일자, “첫 광주퀴어축제... ‘무지개로 발했다’”, <https://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570>(검색일: 2023.10.23.).
- 홍성장, 2014. 『전남일보』, 2014.12.24일자, “성 소수자 문제 ‘뜨거운 감자’ 된 인권 도시 광주”.

<Abstract>

**“Beyond Death, Beyond the Discrimination of the Age”
: The LGBTQ+ Rights Movement’s Queering the May 18 Spirit
in Gwangju**

OI Teun Kim*

The May 18 spirit is not fixed, but is dynamically constructed through discursive contest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by which the LGBTQ+ rights movement in Gwangju (re)defines the spirit of May in the realm of communicative discourse. The most powerful opposing force in the process of queering the May spirit has been the Protestant Right, which has generated a discourse that defines the May 18 spirit as the observance and maintenance of heteronormativity. In contrast, the local LGBTQ+ rights movement in Gwangju has employed a discursive strategy that sheds light on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May 18 Gwangju citizens who resisted and were victimized by state violence and queer people who perform non-conforming practices against heteronormativity and are subject to multiple forms of discrimination and violence. By highlighting the minority status of the May 18 Gwangju citizens and queer people, the local movement has defined the meaning of the May spirit as resistance to discrimination and hatred against queer people and as building conditions for a livable life. It has also (implicitly) expanded the spirit of May through the process of (re)defining the Human Rights City as a queer-friendly city. However, despite these counter-discourse

* Researcher, The May 18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actices, a dualistic and hierarchical approach to sex/gender/sexuality has persisted in the dominant representations of May 18. This suggests that interrogating heteronormativity and gender binaries needs to be mainstreamed beyond the LGBTQ+ rights movement and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of recording, remembering, and commemorating May 18.

Keywords: the May 18 Spirit (the May Spirit), Queering, LGBTQ+ Rights Movement, Protestant Right